

3. 안전망 강화

□ (동향) 단기 고용충격 극복 중점 +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 대응

-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적극적 대응중
 - * (美) 모든 실직자 실업급여 한시지원(최대 39주) (佛) 코로나 기간중 해고금지 등
-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역할 요구 증대
-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투자 확대 병행중
 - * (獨) 노동의 디지털화 위한 '인더스트리 4.0' + 'Arbeiten(노동) 4.0' 동시 추진

□ (추진 방향)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

-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

강점	약점	추진방향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취약한 고용·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기초생보 등)	
기회	위협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 √디지털+그린 뉴딜에 따른 新일자리 창출	√전통적 일자리 축소 및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1.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미래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디지털 접근성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

- ◇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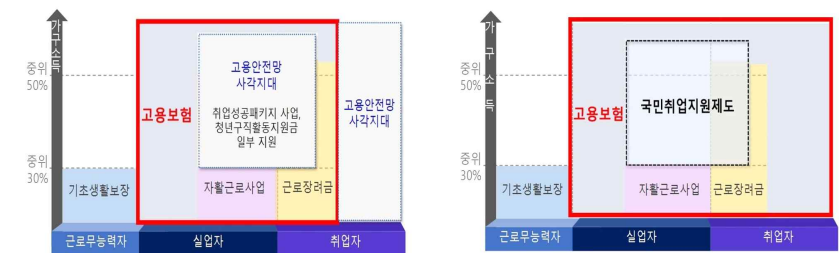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 '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국고 0.8조원) 투자
'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원**(국고 3.2조원) 투자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 특고 등 어려움 집중 → 취약한 고용안전망 노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용시장 구조·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고용보험 가입자수	1,367만명('19년)	1,700만명	2,100만명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7.8만명('19년)	16.6만명	16.6만명+α

1. 프로젝트 개요

-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취업자)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고 직종 확대



<'20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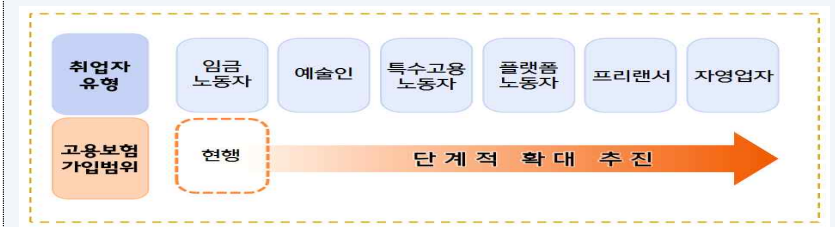
<全 국민 고용안전망 모습>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① (고용보험)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적용 확대

-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 예술인·특고에 구직급여 지원(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모성보호급여) 예술인·특고에 출산전후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 (두루누리 사업)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 예술인·특고 및 노무제공 계약의 당사자(사업주)에 고용보험료 지원

-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과세정보 확대 및 공유 강화 등 소득파악 현행화 체계 구축(법정부 TF 추진, '20.7월~)
-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20년 말)
-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20년말)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14개) 우선 적용 검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등 법적근거 마련(「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7월 입법예고)



② (산재보험) 특고 직종 적용대상 5개 확대(9→14개, 약 8.8만명)

- *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 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 확대 추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현재	개선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운전사 ③학습지도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추가 5종) ⑥퀵서비스 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⑫가전제품설치기사 ⑬화물차주 ⑭방문교사

②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 '22년까지 5.0조원(국고 4.3조원) 투자
'25년까지 11.8조원(국고 10.4조원) 투자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아파도 일하는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기초생보(생계급여) 수급자수	95만 가구	113만 가구	113만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수	569만명	628만명	736만명

1. 프로젝트 개요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① (기초생활보장)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재산가 제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구체적인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보 종합계획('21~'23) 수립시 반영(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기초생활보장법」 §20)
- ②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1년)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22년)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 마련
- ③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 ④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月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 기초연금: ('19) 소득하위 20% → ('20) 소득하위 20~40% → ('21) 소득하위 40~70%
장애인연금: ('19) 생계·의료 → ('20) 주거·교육·차상위 → ('21) 차상위·소득하위 70%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22년까지 **총사업비 3.0조원**(국고 3.0조원) 투자, **일자리 1.4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7.2조원**(국고 7.2조원) 투자, **일자리 3.9만개** 창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대상 지원정책 미흡"		"국민취업지원제도·창업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보호"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국민취업제도 연간 지원자수	-	50만명	50만명
일경험프로그램 지원자수	-	3.5만명	3.5만명

1. 프로젝트 개요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재기 지원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21년 40만명, '22년 이후 50만명)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50만원x6개월 / ***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원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모습>

구 분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저소득층 등	영세자영업자·청년
대상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적용 확대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청년은 120% 이하)	▶ 폐업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연간 규모	140만명+α	50만명+α ('21년 40만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 (체험형)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25년까지 13만명 x 일 2.1만원 지원)
- (인턴형) 취업 준비가 된 구직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일경험 제공
('25년까지 3.6만명 x 월 180만원 x 3개월 지원)

③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창업·재기·성장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22년 17개)에서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체험·자금 패키지 지원*

* 교육(1개월) → 점포운영실습·멘토링(4~5개월) → 사업화자금(1인당 2천만원 5개월)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촉진을 위해
사업정리·취업·재창업을 연계한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사업정리 → 교육 후 취업 성공시 전직 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 업종 전환·재창업 교육(60시간) 및 1:1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자금(1인당 1천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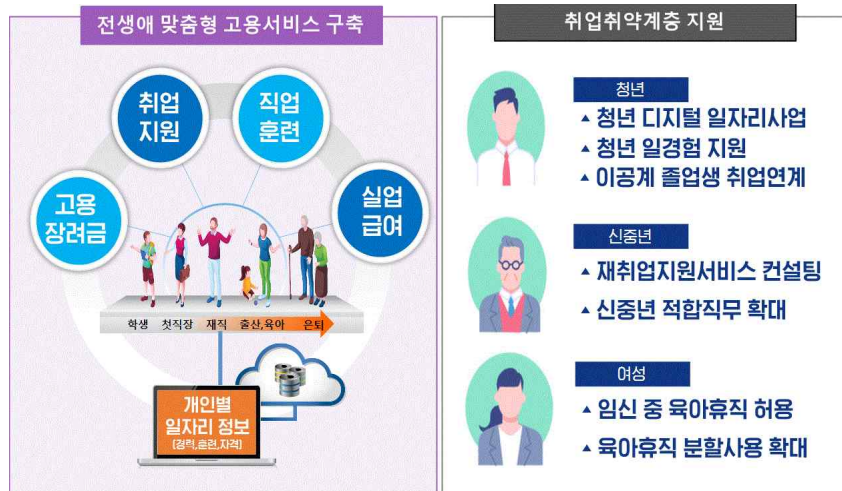
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22년까지 **총사업비 0.9조원**(국고 0.9조원) 투자, **일자리 10.8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2조원**(국고 1.2조원) 투자, **일자리 11.8만개 창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본격화 되면서 일자리 위기 상황 전개"		"고용서비스 혁신과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고용서비스 연간 이용자	390만명('19년)	480만명	560만명
고용률(%)	66.8%('19년)	68%	70%+α
AI 추천 연간 취업 건수	1.2만명('19년)	5만명	10만명

1. 프로젝트 개요

-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 일자리 정보의 통합·디지털화 및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전환 지원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고용서비스 통합·디지털화]

- ① 개인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경력·훈련·자격 등)를 **통합·디지털화**

* 생애(학업 → 노동시장 진입 → 이직·실업·출산·보육 → 재취업 → 노동시장 은퇴)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② 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구직자 일자리 및 구인기업 인재 **자동추천 시스템** 구축

❖ 정부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그린 뉴딜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 신설

- ① (기업 발굴)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하여 최근 피보험자 상실이 많은 디지털·그린 뉴딜 기업 등을 선제 발굴

* 사업장 피보험자 수, 구인 인원 등의 각종 정보를 지도 형태로 한눈에 제공

- ② (유형화) 채용조건과 요구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기업을 유형화

- ③ (맞춤형 서비스) 디지털·그린 뉴딜 기업 등에 고용환경 개선, 맞춤 인력 채용 등을 종합지원하는 '기업지원 패키지' 도입('21년)

* (1단계) 기업 고용여력 분석 → (2단계) 일터혁신 컨설팅 등과 연계한 기업 여건 향상 → (3단계) 관련 장려금 등과 연계한 채용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시장 진입·전환 지원]

- ① (청년) 청년층 일할 기회 제공 및 기업의 채용여력 확보를 위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핵심인력 매칭

-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21년 5만명)

*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으로 일자리 유형화

- 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인건비 한시 지원(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

* 기업이 멘토를 지정하고, 교육 등 실시

- 이공계 졸업생(학사, 석·박사)을 선발·교육하여 대학 보유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 및 취업 연계(2,100명, '21~'23)

② (신중년) 새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그린 관련 직무로 진입 촉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기업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설계·운영에 관한 컨설팅·교육 제공('25년 950개소)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디지털·그린 관련 직무·인원 확대

*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대상 월 최대 80만원, 12개월 지원

③ (지역)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중소기업)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연구소의 R&D 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위해 기본연구과제* 지원

* 기업연구소의 R&D 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 연구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가능 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20.下)

* (현행)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1회 분할 허용
(개선)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임신 중 사용은 분할사용으로 보지 않음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22년까지 총사업비 0.3조원(국고 0.3조원) 투자, 0.1만개 일자리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0.6조원(국고 0.6조원) 투자, 0.2만개 일자리 창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근로환경"		"안전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환경 구축"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 (1만명당)	0.46('19년)	0.27	0.2
연간 근로시간	1957시간('19년)	1800시간대 진입	1850시간

1. 프로젝트 개요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 혁신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혁신]

- ① (빅데이터)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재조업 사업장(약 30만여개)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 구축
- ② (정기점검)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 정기기술지도(연 34.3만회) 및 원포인트 점검(연 6.6만회) 실시
- ③ (상시순찰) 화재·폭발사고 우려가 큰 건설·조선업 현장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400명) 채용
- ④ (물품 지원) 사업장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 관련 예방물품 지원 확대*

* ('20년) 제트팬 3만대, 가스감지시스템 6천대, 이동식에어컨 8천대 등 확충
(21년 이후)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천대, 이동식에어컨 5천대 등 확충

- ⑥ (작업환경)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분진·소음 제거 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25년, 1만개사 지원)

【일하는 방식 혁신】

- (일터혁신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 컨설팅 지원(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
- * ①노사파트너십 ②임금체계 개선 ③평가체계 개선 ④작업조직·환경개선 ⑤평생학습체계 구축, ⑥장시간근로 개선, ⑦고용문화개선, ⑧장년고용안정지원, ⑨비정규직구조개선
- (일터혁신 확산) 장기간 근로개선 등 일터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발굴, 기업간 사례 공유, 중소기업 CEO 코칭사업 등 추진

2. 사람투자

- ◇ 신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인 사람투자 확대

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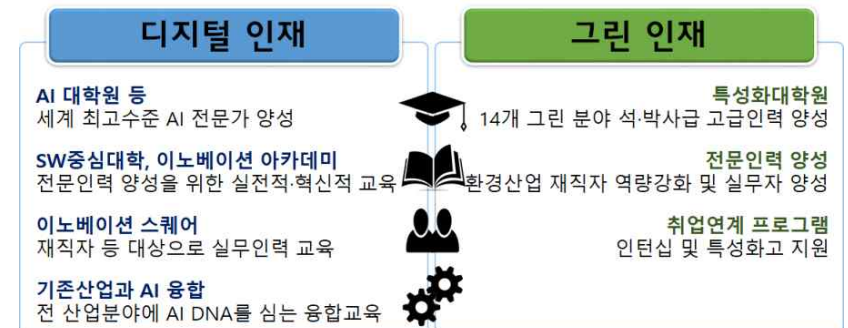
- ◇ '22년까지 총사업비 0.5조원(국고 0.5조원) 투자, 일자리 1.0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2조원(국고 1.1조원) 투자, 일자리 2.5만개 창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AI-SW 및 녹색기술 핵심인재 부족"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그린인재 확보"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AI-SW 핵심인재 양성	1만명	4만명(누적)	10만명(누적)
산업계 AI기술·서비스 이용률	0.6%	기준인력 재교육	1.2%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735명	0.8만명(누적)	2만명(누적)

1. 프로젝트 개요

- 디지털·그린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AI-SW 및 녹색 융합기술 분야의 수준별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 '25년까지 AI-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디지털 인재: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① **(고급인력)** 석·박사급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원 등 지원
 - 첨단산업과 AI 융합 분야에서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해 KIURI 연구단 추가 선정(4→6개)
 -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지정 확대
- ② **(전문인력)** 혁신적 SW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산업수요 기반의 실전 SW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타 전공의 SW 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SW중심대학 40개 운영
 -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 SW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 ③ **(실무인력)**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
 - SW개발·테스트 공간을 확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을 위해 4대 권역별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 ④ **(융합인력)**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 실무자 대상 AI교육 실시
 -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 재직자의 AI 활용역량 강화
 - 제조업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공유·확산 얼라이언스 구축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영역별 전문인력 교육 등 실시

[그린 인재: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명 양성]

- 녹색 혁신 및 지속가능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고급인력)** 기후변화, 그린엔지니어링 등 녹색 융합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특성화대학원 운영
 - **(전문·실무인력)**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 교육 확대

< 인재양성 계획(~'25년) >

	디지털 인재 10만명	그린 인재 2만명
고급	석·박사급 AI 고급인력 약 2,200명	석·박사급 고급인력 약 6,400명
전문	SW 중심대학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약 2.4만명	재직자 훈련 및 실무자 양성 1.3만명
실무	신기술분야 실무인력 3.7만명	특성화고 프로그램 약 600명
융합	AI융합인력 약 3.5만명	

②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 '22년까지 총사업비 0.6조원(국고 0.6조원) 투자, 일자리 3.0만개 창출
- '25년까지 총사업비 2.3조원(국고 2.3조원) 투자, 일자리 12.6만개 창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u>"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의 낮은 비중"</u>		<u>"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강화로 미래형 핵심 인력양성 확대"</u>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미래형 핵심인재 육성 (누적)	-	4만명	18만명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	4%('19년)	15%	20%

1. 프로젝트 개요

- 디지털·그린 뉴딜 등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 향상을 위해 신기술분야 훈련 강화 및 핵심 실무인재 양성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추진】

-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훈련모델(안)>

- ▶ (기업형) 신기술 분야 기업 등이 청년 대상 프로젝트 기반 훈련
- ▶ (우수대학형) 우수대학 교수진이 비전공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
- ▶ (혁신훈련기관형) 민간 혁신기관이 AI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현장 수요 반영 훈련

- 기존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재편하여 디지털·그린 분야 ‘핵심 실무인재’ 특화사업으로 추진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기업맞춤형)

❖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특화” 품질관리체제 도입

- ▶ (진입 개방성) 훈련 실적은 없지만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혁신훈련기관, 기업, 우수대학 등 진입 촉진을 위해 사전 인증 유예
- ▶ (운영 자율성) ①문제해결 중심, ②쌍방향 소통, ③개인 맞춤형·개별화 등 혁신 훈련이 가능하도록 교·강사 등 자율화, 지도감독 등 최소화
- ▶ (지원·평가 유연화) 취업 외 다양한 성과 인정 등 별도 평가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인프라 비용 지원 및 훈련비 지원·정산 절차 간소화

【국민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K-Digital Plus) 추진】

- ❶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 제공

* AI·빅데이터 분석 등의 개념과 기초과정(예: 컴퓨터 개론, 프로그래밍 기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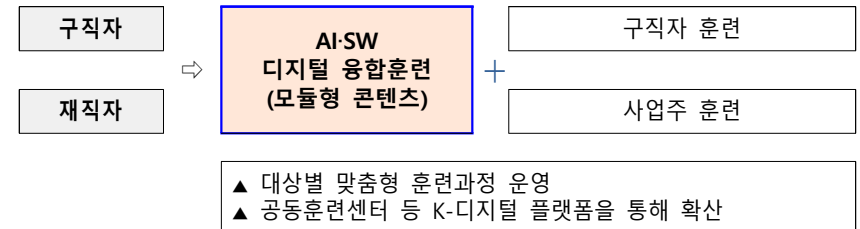
- (구직자) 실업자, 특고, 자영업자 등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융합 훈련 50만원(K-Digital Credit) 지원(‘21년 4만명, ’22년 이후 5만명)
- (재직자)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대중소 상생 등)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 인정* 및 비용지원

* 사업주 환급과정으로 훈련비의 50% 지원

- (콘텐츠) 기초·중급 과정 등 개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 (직무전환·재취업)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 중소기업 대상 1:1 또는 1:多형태의 특화 디지털 훈련 제공(기초·중급·심화 과정 등 모듈형 운영, 지역·산업별 시범 사업 후 확대)
- ▶ (여성·중장년)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을 활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기초과정)
- ▶ (특고·자영업자) 기업·협회, 노동단체 등 협업을 통한 특화 훈련과정 설계·제공(기초과정)

<K-digital Plus 운영체제>



- ❷ (일반국민) 전 국민 대상으로 AI·SW 디지털 융합교육* 등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교육 무료 제공(온라인 중심, 年 60만명)

* 원격훈련 플랫폼(STEP) 등을 통해 제공하며 수료시 공식 이수증 발급

- ❸ (대학생) 전공에 상관없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융합전공* 운영(40개교, 연 1만명)

* 신산업분야 융합과정을 신설하여 융합지식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 ❹ (장애인) 장애인 IT 특화 맞춤형훈련센터(신규 2개소, 전환 1개소)를 마련하여 장애인 훈련생 대상으로 디지털 훈련 지원(1,690명)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 (K-Digital Platform)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 대기업, 폴리텍, 산업별 협회·단체, 우수 훈련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중사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

** 전체 공동훈련센터 208개 중 60개(30%)를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으로 개편

❖ 훈련기관의 자발적 대형화 및 전문화 지원

- (우수 훈련기관 인증 평가) 정량평가 중심 → 정성평가 위주로 개편
- (우수 훈련기관 혜택) 훈련생 모집권 부여, 운영 자율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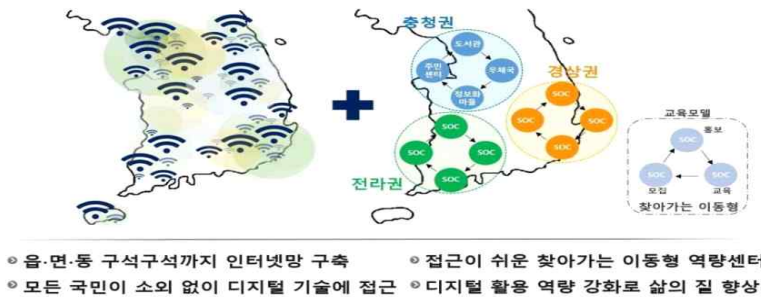
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22년까지 **총사업비 0.6조원**(국고 0.4조원) 투자, **일자리 1.5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0.9조원**(국고 0.6조원) 투자, **일자리 2.9만개** 창출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취약계층 접근성 한계와 디지털 교육 서비스 부족 등으로 디지털 격차 발생"		"전국민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활용역량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농어촌마을 인터넷망	2,000여개 인터넷망 미구축	全농어촌마을에 구축	全농어촌마을에 구축
공공 WiFi	노후화, 품질 저하	고도화(1.8만개) 및 신규 구축(4.1만개)	-
디지털 역량	70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38%(19)	50%	70%

1. 프로젝트 개요

-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인터넷 접근성 및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2.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① (농어촌 인터넷망)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未구축된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 인터넷 未구축 농어촌 마을 2,000여개소 중 민·관 합동 1,200개, 통신사 800개 구축

- ② (공공 WiFi) 지역 주민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료 공공 WiFi 고도화 및 신규 구축

- 주민센터, 도서관, 정류장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WiFi 1.8만개를 우수한 신규 설비로 교체
- 공공장소에 고성능 공공 WiFi 4.1만개 신규 설치

- ③ (전국민 디지털 역량)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지정하여 6,000개 기관(누적)에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예시)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활용, 디지털 윤리 등

- ④ (대체자료)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제공 확대('25년까지 전체 도서출판 대비 12 → 27%)

*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 자료 (점자자료, 녹음자료, 한국수어영상자료 등)